

# 國際競爭力에 영향을 미치는 韓國 產業政策의 變化\*

조동성 \*\*· 이동현 \*\*\*

## 〈 目 次 〉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모형과 가설
- IV.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한 실증분석
- V. 結 論

## I. 문제제기

경제성장과정에서 산업정책이 수행하는 역할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일천하다. 산업정책이란 용어 자체도 1970년대 중반까지 영어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산업정책의 메카라 일컬어지는 일본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용어에 속했다.

특히 구미선진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자본주의 경제가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까닭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산업정책에 대한 인식도 많았다. 또한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정책은 총수요관리와 같이 경제 전반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학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1993년 11월 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산업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에 영향을 미치는 巨視政策에 국한되어야 하며, 특정 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 혹은 억제시키는 微視的 產業政策은 오히려 경제현상의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경태, 1991)

이처럼 산업정책은 경제학의 주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新古典學派 經濟學의 기본 관점이 자원배분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중시하는 산업정책의 속성과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발선진국들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일본의 급격한 경제성장, 개도국들의 정부주도 경제개발의 성공 등의 이유 때문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일본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켰으며, 학자들간에 산업정책의 유용성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Johnson, 1984 ; Thompson, 1989)

이같이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산업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알려진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그러나 산업정책이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Leone & Bradley, 1981 ; Reich, 1982 ; Scott, 1982 ; Eads, et al, 1983 ; Lodge & Glass, 1983) 산업정책의 개념이나 필요성에 관한 당위론적 주장이나 일본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 결정모형을 중심으로 지난 40년 간 한국에서 수행된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을 통시적(通時的)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산업정책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미래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산업정책의 개념

산업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파악은 198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업정책에 관한 통일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정책에 관한 기존연구(Leone & Bradley, 1981 ; Reich, 1982 ;

Scott, 1982 ; Eads, et al, 1983 ; Lodge & Glass, 1983)들을 종합하면 산업정책의 특징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정책은 수요 관리보다는 공급 확대를 중시하는 공급지향적 경제정책이다. 이는 재정 혹은 금융수단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단기적인 경제안정을 추구하는 케인즈의 총수요관리 정책과 대비된다.<sup>1)</sup>

둘째, 산업정책은 자원 형성보다는 배분에 중점을 둔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자원의 양적 증대와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공급 확대나 자본축적 증가와 같은 자원의 증대는 근본적으로 출생율과 사망율, 소비성향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간접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두는 산업정책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원배분에 개입하므로 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도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산업정책이 경제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효율성과衡平性을 들 수 있다. (A. M. Okun, 1975 : 조동성, 1983) 대개의 경우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trade-off)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A. M. Okun, 1975) 따라서 정부는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느 것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둘 것인가? 혹은 효율성(형평성)을 중대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효율성)을 희생할 것인가? 하는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교환비율을 결정해야만 한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가 형평성을 통해 정치적 정통성을 끌어내기보다는 경제발전, 즉 효율성 추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조동성,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중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효율성의 지표로서 국제경쟁력 개념을 사용하였다. 국제경쟁력이란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고유한 경쟁력의 원천을 바탕으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군을 형성시킨다는 것으로

1) 공급지향적인 정책대안에는 산업정책 외에도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 있다. 산업정책과 공급측 경제학은 둘 다 수요측면보다 공급측면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공급측 경제학은 조세정책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산업정책은 차별적 지원과 규제를 통해 자본배분(capital allocation)에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 서로 다르다. (Reich, 1982)

로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經濟의 효율성을 뜻하는 개념이다. (조동성, 1992)

## 2. 국제경쟁력 결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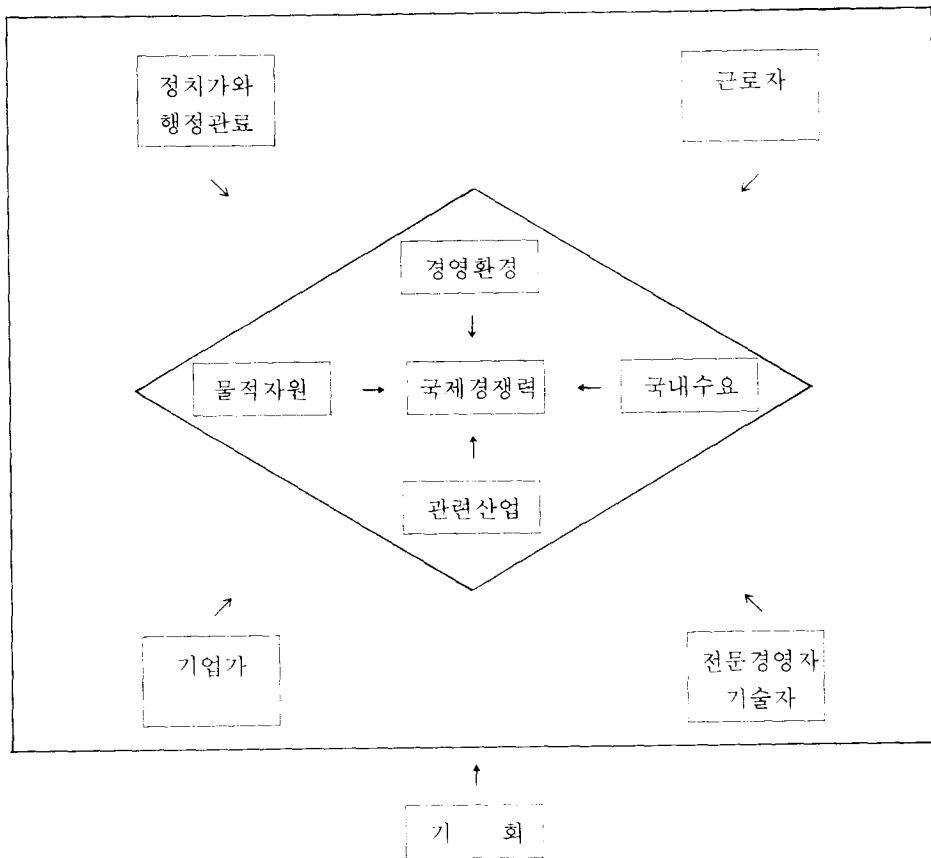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까지 국제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않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勞動力, 資本, 天然資源 등을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높은 임금과 부족한 노동력 하에서도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룩한 독일, 스위스, 스웨덴이나 천연자원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 일본, 이탈리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경쟁력은 단순히 주어진 자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노력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다.(Porter, 199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국제경쟁력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한국적 상황 즉 ‘無에서 有를 창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자본과 기술, 부존자원 등 성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정부와 기업가가 해외로부터 도입하거나 새로이 창출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가장 주된 원동력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人的資源이라는 점이다. 즉 국가경제활동의 저변을 형성하는 양질의 근면 성실한 勤勞者, 경제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며 국가의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政治家와 行政官僚, 도전정신과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행한 기업가(起業家),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 專門經營者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끊임없는 도전을 해 온 技術者 등이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 이끌어 나갈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었다.(조동성, 1992)

따라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한 나라의 산업이 가진 물적자원, 경영환경, 관련산업, 국내수요라는 네 가지의 國際競爭力 決定客體와 한 시점의 국제경쟁력을 다음 단계로 변화시키는 주도자로서 근로자, 정치가와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경영자와 기술자라는 네 가지 國際競爭力 決定主體, 그리고 순수한 外部環境要因으로서 機會라는 아홉 가지 요인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결정객체가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基本要因이라고 한다면 결정주체는 이들 기본요인들을 配列하고 結合

해서 실질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국제경쟁력 결정모형



아홉 가지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 III. 연구모형과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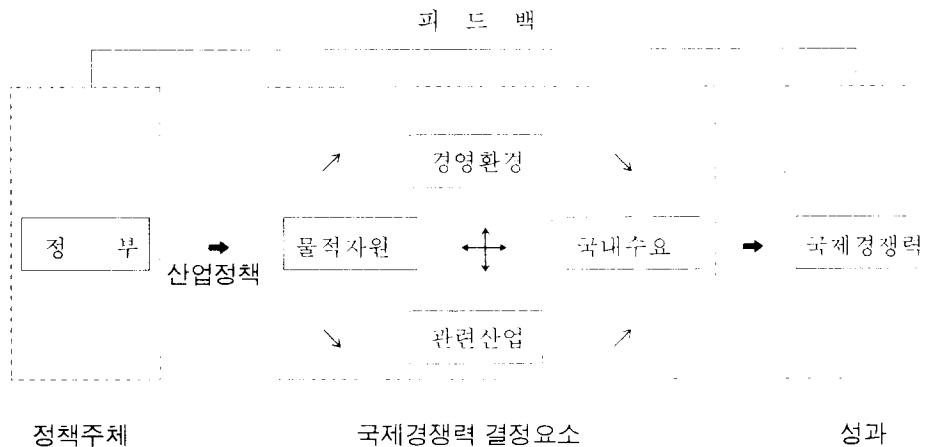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이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그림 2〉와 같이 模型化하였다. 이 모형은 크게 정부(투입변수), 국제경쟁력 결정요소(매개변수), 성과(산출변수)라는 세 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결정요인		내용
물적자원	부존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물자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철광석, 금, 은 등의 비에너지 자원</li> <li>농림수산자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li> <li>자연자원: 토지, 기후, 경치, 물, 공기 등으로 구성</li> </ul>
	창출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자원: 과학적·기술적 지식(대학, 정부연구소, 기업연구소 등에 의해 창출)</li> <li>교육제도와 직업훈련제도</li> </ul>
경영환경	국가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시적 요소: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li> <li>비가시적 요소: 국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시장구성원의 상거래 질서의식과 신용</li> </ul>
	산업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경쟁정도: 진입장벽의 종류와 높이, 경쟁자의 수와 규모, 제품의 차별화 정도</li> </ul>
관련산업	기업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전략과 조직, 기업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자세와 형태 등</li> </ul>
	지원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 정보, 수송산업 등 서비스 부문</li> </ul>
국내수요	수직적, 수평적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류부문과 하류부문 산업</li> <li>같은 기술, 원재료, 유통, 마케팅 등을 활용하는 산업</li> </ul>
	양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시장 규모와 성장성</li> </ul>
	질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까다롭고 엄격한 구매기준을 가진 소비자</li> </ul>

앞서 살펴본 국제경쟁력 결정모형에 의하면 정부(정치가와 행정관료) 이외에도 근로자, 기업가, 전문경영자와 기술자 등이 결정객체(국가환경)에 영향을 미쳐 국제경쟁력을 결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정부가 產業政策을 통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만 살펴보기 때문에 나머지 결정주체들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은 물적자원, 경영환경, 관련산업, 국내수요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국제경쟁력과 경제력집중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Porter, 1990; 조동성, 1992) 끝으로 정부의 產業政策은 국제경쟁력 강화 혹은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 결과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정부의 다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2〉 산업정책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산업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여 투자에 따른 私的 이익보다 社會的 이익이 더 큰 경우, 정부가 자원배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즉, 시장실패가 없다면 시장기구 대신에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국보다는 시장실패가 폭넓게 존재하는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산업정책이 강조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메카니즘이 활성화되어 시장실패 현상이 줄어들다면 산업정책의 내용도 바뀔 것이다.(Johnson, 1984 ; Mutoh et al, 1986 : Okimoto, 1989)

한 나라가 가진 국제경쟁력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결정하는데, 경제수준은 일반적으로 후진국→개도국→중진국→선진국의 단계를 거쳐 변화한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9개 요인이 모든 단계에서 제각기 1/9씩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마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요소가 달리 나타난다.

예컨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후진국은 국제경쟁력 원천 중에서 오로지 어느 정도의 물적자원과 근로자만을 갖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인 개도국에서는 정부가 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각종 경제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산업마다 1개 또는 소수 기업만을 선정하여 독점사업권을 주기도 한다.(조동성, 1992)

경제발전이 초기단계를 지나 중진국기에 접어들면 기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전개하여 각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국제경쟁력을 창출하는 원천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비롯하여 보험, 정보, 수송 등 서비스 부문과 같은 기술이나 원재료, 유통, 마아케팅 등을 활용하는 관련산업을 들 수 있다.

한 산업에서 형성된 국제경쟁력이 수평적·수직적 관련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이 가장 강해지는 단계가 선진국이다. 반면에 자금의 인위적 배분, 시장보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 지원활동은 축소된다. 이처럼 한 국가의 산업정책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책의 주요 내용이 물적자원에서 경영환경으로 다시 관련산업과 국내수요로 바뀌게 된다.(조동성, 1992)

가설 1: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된 내용은 물적자원→경영환경→관련산업→국내수요로 바뀐다.

또한 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바뀌게 되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이 주어진(endowed) 요소에서 창출되는(created) 요소로, 양적인 요소에서 질적인 요소로, 기본적인(basic) 요소에서 고도화된(advanced) 요소로 변화할 것이다. (Porter, 1990)

가설 2-1: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물적자원에 관한 산업정책의 내용은 부존자원 중심에서 창출자원 중심으로 바뀐다.

가설 2-2: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경영환경에 관한 산업정책의 내용은 국가수준→산업수준→기업수준으로 바뀐다.

가설 2-3: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관련산업에 관한 산업정책의 내용은 지원산업 중심에서 수직적·수평적 관련산업 중심으로 바뀐다.

가설 2-4: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내수요에 관한 산업정책의 내용은 양적 요인에서 질적 요인으로 바뀐다.

정부의 역할은 크게 규칙제정, 지원, 규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바뀌게 될 것이다. 즉, 경제가 발전하면 규칙제정이라는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고 지원과 규제의 역할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시장 메카니즘이 정착되면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기업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규제의 역할이 늘어날 것이다.(조동성, 1993)

가설 3-1 :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규칙제정이라는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고 지원과 규제의 역할은 늘어날 것이다.

가설 3-2 :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역할보다는 규제 역할이 늘어날 것이다.

#### IV.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한 실증분석

##### 1. 資料蒐集과 測定

본 연구에서는 產業政策의 内容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产业政策 관련 뉴스를 年度別로 10개씩 선정하여 각각의 뉴스를 정책의 내용에 따라 물적자원, 경영환경, 관련산업, 국내수요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 뉴스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의 제 1면 혹은 경제면에 나타난 정부의 산업정책 관련 기사 중에서는 1면에 나타난 기사를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같은 면에 실린 기사의 경우는 우측 상단에 실린 기사를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전체 신문 면에서 그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였다. 기사의 비중을 계산할 때는 기사 안에 포함된 단어의 수와 기사가 몇 단에 걸쳐 실렸는가를 고려하였다.

또한, 각 시기별로 나타난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문헌들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이 방법은 총괄적 교수분석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 즉 정부가 특정 산업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 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2. 分析結果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산업정책 관련뉴스를 내용에 따라 네 가지 범주에 의해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정부의 역할(규칙제정, 지원, 규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때 기간을 네 단계로 나눈 것은 1948년, 1961년, 1973년, 1980년을 기점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sup>2)</sup>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국의 산업정책은 대부분 물적자원과 경영환경에 관한 것들이며 관련산업과 국내수요에 관한 정책은 비중이 매우 적다. 그러나 시기별로 각각의 비중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50년대에는 물적

<표 2> 시기별 정부정책의 변화

내용	시기	1948년~ 1960년	1961년~ 1972년	1973년~ 1979년	1980년~ 1991년	합 계
		*15(#12%)	8( 7%)	-	-	
물적자원	규칙제정	*15(#12%)	8( 7%)	-	-	23( 5%)
	지원	60( 46%)	32( 27%)	19( 27%)	27( 22%)	138( 31%)
	규제	4( 3%)	4( 3%)	7( 10%)	7( 6%)	22( 5%)
소계		79( 61%)	44( 37%)	26( 37%)	34( 28%)	183( 41%)
경영환경	규칙제정	33( 25%)	25( 21%)	6( 9%)	8( 7%)	72( 16%)
	지원	9( 7%)	22( 18%)	9( 13%)	18( 15%)	58( 13%)
	규제	9( 7%)	15( 13%)	13( 18%)	32( 27%)	69( 16%)
소계		51( 39%)	62( 52%)	28( 40%)	58( 49%)	199( 45%)
관련산업	규칙제정	-	1( 1%)	-	-	1( 0%)
	지원	-	11( 9%)	8( 12%)	11( 9%)	30( 7%)
	규제	-	-	1( 1%)	1( 1%)	2( 1%)
소계		0( 0%)	12( 10%)	9( 13%)	12( 10%)	33( 8%)
국내수요	규칙제정	-	-	1( 1%)	1( 1%)	2( 1%)
	지원	-	1( 1%)	-	8( 7%)	9( 2%)
	규제	-	1( 1%)	6( 9%)	7( 6%)	14( 3%)
소계		0( 0%)	2( 2%)	7( 10%)	16( 13%)	25( 6%)
합계		130(100%)	120(100%)	70(100%)	120(100%)	440(100%)

\* 해당기사의 수

# 각 기간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2) 1948년에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1961년에 5·16혁명이 있었으며, 1972년 헌법 개정(유신)으로 이듬해인 1973년에 제4공화국이 출범했으며, 1980년에는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자원에 관한 정책이 전체 산업정책 중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80년대에는 28%로 줄어들었고 대신 경영환경에 관한 정책은 39%에서 49%로 늘어났다. 또한 관련산업과 국내수요에 관한 정책도 전체에서 차지한 비율은 작지만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은 물적자원에 관한 산업정책을 부존자원에 관한 정책과 창출자원에 관한 정책<sup>3)</sup>으로 다시 세분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물적자원에 관한 정책은 대부분 부존자원에 관한 것이며 창출자원에 관한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부존자원에 관한 정책의 비중이 줄고 창출자원에 관한 정책의 비중이 늘고 있다.

부존자원에 관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1948년~60년 사이에는 주로 귀속재산의 불하, 수입권 배정, 해외원조 배정 등이 중심이었다. 특히 해외원조는 전후 경제복구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 시기 한국경제의 발전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약 1,738백만 달러가 제공된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를 보면<sup>4)</sup> 약 72%가 원자재로 도입되었고 나머지 28%만 시설재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원조패턴은 이 기간 동안 생활재 산업보다는 소위 三百產業(면방직, 세분, 제당산업)이라 불리우는 原料加工·消費財產業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를 정책들은 1954~60년 사이 연평균 실질성장을 3.4%<sup>5)</sup>가 말해주듯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기초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51년 윤행보유불 사용규정변경<sup>6)</sup>이나 1952년 '중식불 사건'<sup>7)</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다.

3) 부존자원은 특정 국가가 별다른 노력 없이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자원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광물자원, 농림수산자원, 원조, 차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창출자원은 인간이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낸 자원이나 지식, 자원, 기술 등을 부드는 창출 메카니즘 자체를 의미한다.

4) 이는 같은 기간 중 미국의 대한원조의 76.3% 그리고 해방 이후 1960년까지 미국의 대한원조 총액의 55%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대근, 정운영, 1984)

5) 전경련, 한국경제정책 40년사, 전경련, 1986., p. 12 참조.

6) 1951년 12월 15일 정부는 윤행보유불 사용을 액수의 다과를 바른하고 대통령이 인가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7) 정부가 보유한 단지를 불하받은 무역상사들이 미국과 일본에서 사들이 떨가루를 시중에 강제가격에 팔지 않고 시가에 팔아 폭리를 취한 사건이다.

〈표 3〉 시기별 물적자원에 관한 산업정책 변화

시기 내 용	1948년~ 1960년	1961년~ 1972년	1973년~ 1979년	1980년~ 1991년	합 계
부 존 자 원	*77( #97%)	41( 93%)	23( 88%)	26( 76%)	167( 91%)
창 출 자 원	2( 3%)	3( 7%)	3( 12%)	8( 24%)	16( 9%)
합 계	79(100%)	44(100%)	26(100%)	34(100%)	183(100%)

\* 해당기사의 수

# 각 기간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1961년~72년 사이에는 차관배분과 은행융자가 중요한 물적자원 정책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많은 차관이 도입되었으며<sup>8)</sup> 수출촉진을 위해 재벌기업들에게 차관과 은행융자가 집중되었다.<sup>9)</sup> 이들 정책은 수출기업의 자본축적과 급속한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지만 자금부족과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에 커다란 격차를 가져왔다.

1973년에서 1979년 사이에는 정부가 重化學工業化, 綜合貿易商社와 輸出드라이브政策, 海外建設事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들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각종 금융특혜와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베풀었다. 정부는 1973년 제정된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해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정부 임의대로 중화학 공업 건설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sup>10)</sup>

1980년 이후에도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지속시켰으나 성장 최우선 정책에서 안정위주의 균형성장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반도체, 신소재, 정밀화학, 유전공학, 컴퓨터, 항공우주산업, 통신분야 등 첨단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서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부존자원뿐만 아니라 창출자원에 관한 정책의 내용도 시기별로 변해 왔다. 1950년대에는 주로 수산업, 광업 등에 제한적으로 필요한 技術者養成에 중점

8) 1968년부터는 1년 간의 외자도입액이 1959~66년 간의 외자도입총액을 초과하였다.(조동성, 1990)

9) 1969년 기준으로 10대 재벌이 전체차관액 중 약 21%를 차지했으며 1964년 기준으로 9개 재벌이 차지하는 은행대출은 당시 화폐발행고의 82%, 통화량의 43%에 해당하는 액수였다.(박병윤, 1982)

10) 이때 전체 대출규모의 59%를 점하는 정책금융의 대부분을 중화학공업 등 정부의 정책적 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재벌들이 수혜하였다.(조동성, 1990)

을 두었으나 1960~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이에 필요한 技能人力 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계 교육에 대한 투자와 職業訓練強化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는 소위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지식 정보 집약형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단순한 기능공 양성에서 탈피, 기초과학육성과 첨단기술개발로 정책의 초점을 바꾸었다.

〈표 4〉 시기별 경영환경에 관한 산업정책의 변화

시기 내 용	1948년~ 1960년	1961년~ 1972년	1973년~ 1979년	1980년~ 1991년	합 계
국가차원	*37( #72%)	34( 55%)	5( 18%)	18( 31%)	94( 47%)
산업차원	9( 18%)	26( 42%)	19( 68%)	37( 64%)	91( 46%)
기업차원	5( 10%)	2( 3%)	4( 14%)	3( 5%)	14( 7%)
합 계	51(100%)	62(100%)	28(100%)	58(100%)	199(100%)

\* 해당기사의 수

# 각 기간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4〉는 경영환경에 관한 정책을 국가차원, 산업차원, 기업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sup>11)</sup> 〈표 4〉를 보면 1950~60년대에 특히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해방 후의 무질서와 6·25사변을 겪으면서 극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과 경제파탄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시정하고 市場經濟體制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실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산자, 상인, 소비자 등 시장구성원들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 경제활동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정책을 꾸몄다.

그러나 정부는 1960~70년대 고도성장과정에서 빚어진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일으킨 사회·경제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11) 경영환경은 국가차원, 산업차원, 그리고 기업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경영환경은 가시적인 요소와 비가시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가시적인 요소는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 경제활동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하며, 비가시적인 요소는 그 나라 국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생산자, 상인, 소비자 등 시장구성원의 상거래 질서의식과 신용 등을 포함한다. 산업차원의 경영환경으로는 경쟁자의 수와 규모, 진입장벽의 종류와 높이, 제품의 차별화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차원의 경영환경은 기업의 전략과 조직, 기업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자세와 행태 등이 있다.(조동성, 1992)

1981년에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sup>12)</sup> 따라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國家次元의 經營環境 政策보다는 產業次元의 經營環境 政策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관련산업에 관한 정책은 1950년대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1960년대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66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나타났다. 1960년대 초 정부는 여타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초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멘트, 비료, 청유, 석유화학, 철강 등의 기간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76) 때부터 1·2차개발계획에 의해 개발 성장된 신흥산업에 원자재와 시설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해외의존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립경제달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하기 위해 적극적인 重化學工業 育成政策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의 기계공업단지, 포항 및 광양의 철강공업단지, 울산 및 여천의 석유화학단지, 온산의 비철금속단지, 거제도의 조선공업단지, 구미의 전자공업단지 등이 조성되었다.

국내수요에 관한 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수출품 품질검사 강화,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투자, 환경오염에 관한 규제, 유통산업 근대화, 소비자 보호법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산업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5%에 불과하다.

〈표 5〉 시기별 정부역할의 변화

내용	시기 1948년~ 1960년	1961년~ 1972년	1973년~ 1979년	1980년~ 1991년	합계
규칙제정	*48(#37%)	34(28%)	7(10%)	9(7%)	98(22%)
지원	69(53%)	66(55%)	36(51%)	64(53%)	235(54%)
규제	13(10%)	20(17%)	27(39%)	47(40%)	107(24%)
합계	130(100%)	120(100%)	70(100%)	120(100%)	440(100%)

\* 해당기사의 수

# 각 기간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5〉는 시기별로 정부역할의 변화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칙제정의 비중은 1950년대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

12)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실시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들 수 있다.

초기에 정부가 주로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해 각종 경제관련 법규를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규제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대기업 편중지원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각종弊害가 속출하자 이를 是正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규제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각 시기별 정부정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각時期別 產業政策의 主要內容

시기 내용		1948년~1960년	1961년~1972년	1973년~1979년	1980년~1991년
물적 자원	부존자원	· 귀속재산불화 · 수입인가 · 해외원조배경	· 차관배분 · 정책금융	· 정책금융 · 외자도입업체 관리 강화	· 예산관리제도
	창출자원	· 수산업, 광업 기술자 양성	· 기능공 양성 · 실업계 교육 투자	· 기능공 양성 · 직업훈련강화	· 기초과학육성 · 첨단기술개발
경영 환경	국가차원	· 각종 경제 관련법규제정	· 사회간접자본 확충	-	· 자본시장육성
	산업차원	-	· 수입규제	· 수입규제 · 독과점규제	· 공정거래법
	기업차원	-	-	-	· 노동관계법 정비
관련산업		-	· 기간산업육성	· 중화학공업 단지 육성	· 중소기업육성 및 계열화
국내수요		-	· 정부구매	· 정부구매 · 품질검사강화	· 에너지절약 · 환경오염규제 · 소비자보호 · 유통산업육성

## V. 結論

### 1. 研究結果 및 示唆點

지금까지 국제경쟁력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의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촛점이 물적자원에서 경영환경으로 바뀌었고 전체 정책의 약 14%에 불과하지만 관련산업과 국내수요에 관한 정책도 그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물적자원과 경영환경에 관한 정책은 부존자원에서 창출자원으로 국가수준에서 산업수준으로 정책의 촛점이 바뀌었다. 그러나 관련산업과 국내 수요에 관한 정책은 전체 산업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앞서 설정한 가설 2-3과 2-4는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가 정부의 정책결정자와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물적자원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부존자원에 관한 정책보다는 창출자원에 관한 정책, 특히 선진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창출자원에 관한 정책의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기능공 양성과 직업훈련강화에만 중점을 두었었고 첨단기술에 관한 투자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매우 부족하다.

둘째, 경영환경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한 산업차원의 정책(경쟁촉진)과 함께 근로자 복지향상과 노사 협력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한 기업차원의 정책(협력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독과점 규제는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므로 국제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력집중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기업차원의 경영환경정책은 노사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노사관계에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경영환경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은 자본이 유망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갖춘 자본시장을 육성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자본시장은 기업간 경쟁을 조장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품공급산업과 관련산업을 육성시켜 산업집군을 심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과거 기간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시멘트, 비료, 청유, 석유화학, 철강, 기계, 비철금속, 전자, 조선산업 등을 발전시켰지만 이들 산업들이 아직도 대부분의 핵심부품과 기계류를 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질 좋은 중간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공급산업이나 여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관련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수요에 관련된 정책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선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국소비자들의 욕

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욕구를 외국 소비자들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까다로운 국내 수요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정부는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제품 품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에 관한 규제가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산업정책도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변해야 할 것이다. 개별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나 재벌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정부결정을 통한 자본배분 등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경제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최근에 정부는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위해 주력사업을 선정케 하고 여신관리규정도 주력사업과 비주력사업에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원인 때문에 재벌 스스로 전문화하는 방안과 달리 정부가 전문화를 강요한다면 자칫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도록 기업간 경쟁을 조장하고 효율적 자본시장을 육성하여 재벌 스스로 전문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립하는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과거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정책들을 써 왔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정책실행 과정에서 사후 관리를 잘못해 어떤 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수립된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 研究의 限界 및 提言

본 연구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료원에 대한 문제이다. 신문이란 매체는 정부정책이나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살펴보는 데는 매우 적합한 자료원이다. 그러나 기자나 편집

자의 주관과 편견, 지면의 한계, 오보 등으로 정부의 정책 그 자체를 분석할 때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48년부터 1991년까지 동일한 자료원에서 산업정책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신문이 비교적 중요한 경제사건은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신문을 자료원으로 선택했다.

둘째, 정부의 산업정책이 국제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는 산업정책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산업정책이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복잡하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다른 연구자에 의해 객관적 평가방법이 제시된다면 산업정책의 올바른 평가는 물론 정부의 정책결정자나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립된 정책의 사전적인 내용만 다루었지 사후적인 효과나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산업정책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보다는 실행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는 산업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객관적 방법을 바탕으로 정부에 의해 수립된 산업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강철규외 2인,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0.
2. 강호진, 한국의 경제력집중,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3. 김석준, 한국산업화 국가론, 도서출판 나남, 1992.
4. 박병윤, 재벌과 정치, 도서출판 한국양서, 1982.
5. 사공일, 경제성장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 2권 1호, 1980. 3.
6. 산업연구원 무역연구부 일본실 역, 산업정책의 경제분석, 산업연구원, 1989.
7. 신유근, 한국의 경영, 박영사, 1992.
8. \_\_\_\_\_, 기업과 사회, 경문사, 1986.
9. \_\_\_\_\_, 한국기업의 특성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10. 안청시 편, 한국정치경제론, 법문사, 1990.
11. 양우진 흥장표외, 한국자본주의 분석, 일빛신서, 1991.
12. 양원근, 대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1992.
13. 윤창호 염재호, 무역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 경제연구원, 1992.
14. 이경태,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산업연구원, 1991.
15. 이규억 · 이재형,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 7권 1호, 1985. 3.
16. \_\_\_\_\_,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90.
17. 이대근 · 정운영,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1984.
18. 이영세외, 산업금융정책의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 1987.
19. 이학종 · 정구현外 共著, 한국기업의 구조와 전략, 법문사, 1986.
20. 전경련, 한국경제정책 40년사, 전경련, 1986.
21. 정구현, 한국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영구조, 대한상공회의소, 1987.
22. 조동성, 국가경쟁력·선진국이 되는 지름길, 매일경제신문사, 1992.
23. \_\_\_\_\_,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0.
24. \_\_\_\_\_, 경영정책과 장기전략계획(전정판), 영지문화사, 1987.
25. \_\_\_\_\_, 한국의 종합무역상사, 법문사, 1983.
26. 조순 · 정운찬,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0.
27.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28. 홍문신, 강두룡 역, 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제, 산업연구원, 1986.
29. 小野五郎, 實踐的 產業政策論, 通商產業調查會, 1992(平成 4년).
30. Baker, M. J. and Susan J. Hart, *Marketing and Competitive Success*, Philip Allan, 1989.
31. Bain, J. S., *Industrial Organization*, N. Y., John Wiley and Son Inc., 1959.
32. Beckerman, W. (ed.) *Slow Growth in Britain: Causes and Consequences*, Oxford : Clarendon Press, 1979.
33. Chandler, A. D., Jr, *Scale and Scope - Th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34. \_\_\_\_\_, *The Visible Hand -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35. \_\_\_\_\_ and Herman Daems eds., *Managerial Hierarchie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80.
36. Dunning, J. H.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81.
37. Francis A. and P. K. M. Tharakan. (ed.),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an Industry*, London & N. Y. : Routledge, 1989.
38.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1962.
39. Grant, R. M., "The resource-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 Implication for strategy formul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991., pp. 119-135.
40. Greer, D. F., *Business, Government, and Society*(2nd ed),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1987.
41. Johnson, C.,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82.
42. \_\_\_\_\_, 'The industrial policy debate re-examined', *Californian Management Review*, Vol. 27, No. 1, Fall, 1984., pp. 71-89.
43. \_\_\_\_\_, *Industrial Poicy Debate*, Institute for Comtemporany Studies, 1984.
44. Keegan, W. J. *Global Marketing Management*(4th ed. ),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89.
45. Kogut, B., 'Designing Global Strategies : Comparative and Competitive Value-Added Chains', *Sloan Management Review*, Summer 1985.
46. Komiya, R., M. Okuno and K. Suzumura, *Industrial Policy of Japan*, Academic Press, 1988.
47. Lawrence, R. Z., *Can America Compete?*,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e, 1984.
48. Leone, R. A. & S. P., Bradley, "Toward an Effective Industrial Policy", *Harvard Business Review*, Nov. -Dec., 1981.
49. Lindbeck, A., 'Industrial Policy as an Issue in the Economic Environment', *World Economy*, Vol. 4, 1981.,pp. 391-405.

50. Lindblom, C. E., *Politics and Markets : The World's Political-Economic Systems*, Basic Books, New York, 1977.
51. Lodge, G. C. & W. R. Glass, "U. S. Trade Policy Needs One Voice",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83.
52. Mutoh, H., S. Sekiguchi, K. Suzumura & I. Yamazawa, *Industrial Policies For Pacific Economic Growth*, ALLEN & UNWIN, Australia, 1986.
53. Okimoto, D. I., *Between MITI and the Market*,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89.
54. Okun, A. M.,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 C., 1975.
55. Penrose,E.,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Basil Blackwell, 1959.
56. Porter, M.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 Y. : The Free Press, 1990.
57. \_\_\_\_\_ (ed.),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Boston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6.
58. Reich, R. B., "Why the U. S. Needs an Industrial Policy?",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1982.
59. Rugman A. M. and Joseph R. D'Cruz, *Fast Forward : Improving Canad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ublished by Kodak in Canada, 1991.
60.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61. Scott, B. R., "Can Industry Survive the Welfare State?", *Harvard Business Review*, Sep.-Oct., 1982.
62. Shelling, T. C., "Command Control", *Ethical Theory and Business*, Prentice-Hall, 1979.
63. Steiner, G. A., *Business and Society*, Random House Co., 1975.
64. Stigler, G.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Spring, 1971.

65. Thompson, G., *Industrial Policy - USA and UK Debates*, Routledge, London, 1989.
66.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67. Weidenbaum, M. E., *Business, Government, and the Public*, Prentice-Hall Co., 1980.
68. Wilson, J. Q., *American Government : Institutions and Politics*, D. C. Heath and Co., Lexington, Mass., 1980.
69. Wolf, C. Jr., *Markets or Governments :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MIT Press, Cambridge Mass., 1988.